

다시 촛불 든 1만여 전주 시민들 “범죄 공범자 박근혜는 하야하라”



지난 19일 전주시 관동로 사거리에서 열린 '전북도민 2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앉아 있다.

전북도민 2차 총궐기

지난 5일 열린 1차 총궐기 참가 인원의 두 배 이상 대학생·정치권까지 가세 차분한 분위기 속 진행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씨 국정농단에 분개한 전북도민 1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지난 19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국회의와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주 관동로 사거리에서 열린 '전북도민 2차 총궐기'에 1만여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참여인원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지난 5일 1차 총궐기에 모인 3,500명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이날 전주 관동로 사거리에서 모인 인원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

입 반대집회'에 모인 도민과 비슷한 규모다.

집회에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종교계와 대학생 총학생회,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인원을 불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집회 시작 30여분 전부터 거리에 나와 시민들과 구호를 외쳤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 당원과 당직자들도 촛불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또 국민의당 유성엽·김광수 국회의원, 최진호 전북도의회의 의원 등도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집회는 대학생·청소년들의 자유 발언과 촛불 파도타기, 시민·사회단체가 준비한 공연 순으로 저녁 늦게까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민 2차 총궐기의 열기는 풍남문에서까지 이어졌다.

늦은 밤 전주 풍남문광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사 앞까지의 행진도 벌였다. /김민근 기자

'불편 초래' 항의에 사과...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여

전주 관동로 사거리에서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열린 '전북도민 2차 총궐기대회'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일부 보수언론과 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집회 참여자의 폭력은 물론이고 고성과 욕설 등 무질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되레 교통불편을 이유로 촛불에 항의하는 시민을 상대로도 정중한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했다. 집회를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설명하는 등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오후 6시30분께 집회 장소에 마련된 무대 뒤편에서 발생한 작은 소동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줬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이 "지금 교통이 마비됐는데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항의하자 집회 참여자는 먼저 미안함을 표하고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

지역 노동단체에서 나온 집회 참여자는 "교통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인 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혼란한 국정에 분노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었다. 부디 오늘만큼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주위에는 대학생과 청소년, 농민, 종교인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거리에 나선 어린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도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후로도 교통체증에 불만을 나타낸 몇몇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집회를 보고 별다른 항의 없이 자리를 떠났다.

집회를 주최한 '전북시국회의'는 일정이 마무리 된 뒤 참여자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등 주변 정리에 나서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주변 정리에 동참했다. /뉴스

검찰,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기로 야권, 탄핵 정국 '불가피' 시민 촛불, 더 타오를 듯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사실상의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것인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들의 범죄행위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3명의 혐의인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뉴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전대미문의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어서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한 오는 26일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100만 촛불'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이어 탄핵 정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퇴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야권의 남은 카드도 탄핵으로 좁혀지고 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더이상 탄핵을 추진하려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뉴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도내 경제관련 기관 한목소리

전북지역 40여개 경제관련 기관들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와 43개 경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는 지난 18일 전주고용노동정책 회의실에서 군산조선소 존치 등 지역경제 현안문제 및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우려와 관련, 협력업체의 어려움과 대량 실직사태 상황에 대비한 각 기관 간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법도민 100

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진흥 정무부지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북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산업 등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우려와 관련해 협력업체의 어려움과 대량 실직사태 상황에 대비한 각 기관 간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에 고광훈 고용노동부 전주지정장은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의 실업사태에 대비하여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관삼대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